

---

# **'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**

**- 생태계 회복 및 지원 복원 · 혁신 중심으로 -**

---

**2025. 12.**

**고용노동부**



# 목 차

I. 추진배경 .....	1
II. 추진방향 .....	3
1. 목표와 전략 .....	3
2. 추진과제 .....	4
III. 세부 추진과제 .....	5
1. 사회적가치 성과기반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.....	5
2. 지역 중심의 협력 생태계 조성 .....	10
3. 민관협력형 지원체계 혁신 .....	11
4.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 .....	13

## I. 추진배경

-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,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핵심 주체
  - 특히,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·환경위기, 지역소멸 등 복합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
- '07년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정 이후 정부 주도 육성·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근로자 수, 매출액 등 양적으로 성장
  - 다만, '22년을 정점으로 '23년부터 사회적기업 신규 인증 및 인증유지 기업 수가 감소하며 증가추세 약화



- 그간 정부 주도·직접지원 중심 지원구조로 지속가능성에 한계 노출
  - 기존의 획일적 인건비 중심 지원은 정부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장기 고용효과에 제한적
  - 개별기업 단위 중심 지원은 사회적가치가 기업 단위를 넘어 지역 공동체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구조적 제약
- 특히, 지난 정부 급격한 예산 축소, 민간 지원체계 폐지로 지역 기반 생태계가 급격히 약화되고,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
  - \* [예산 축소] ('23) 2,042억 → ('24) 830억 → ('25) 284억 ('23년 대비 86% 감소)
  - [지원체계 변경] ('24) 민간지원기관(41개) 폐지 → ('24~'25) 정부(진흥원) 직영

⇒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 재정립과 생태계 복원이 시급

## 【참고】 사회적기업 현황 및 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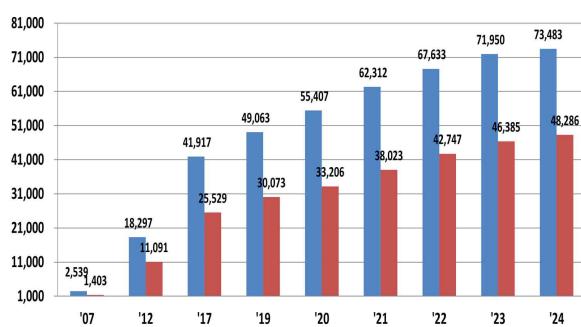
### 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증가

- '24년 전체 사회적기업 근로자 7.3만명 중 취약계층은 65.7%인 4.8만명으로, '07년(전체 2,539명, 취약 1,403명) 대비 약 34배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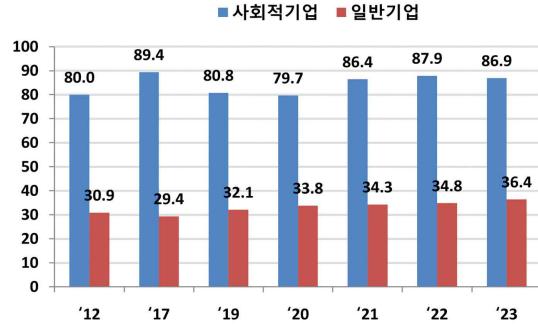
### ② 사회적기업 인증유지율(5년 기준)

- 사회적기업 인증유지율('23년 86.9%)은 일반기업 생존율('23년 36.4%)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기 변동 속에서 고용 유지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는 특성

① [ 전체 근로자(취약계층) 수(명) ]



② [ 5년 인증유지율(%) ]



### ③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

- '24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은 445만명으로 전년(487만명)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, '07년(1.7만명) 대비 크게 증가(262배)

#### ※ 분야별 실적 및 사례

- (돌봄)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 방문 간병, 로컬푸드를 활용한 도시락 제공, 아동·청소년 돌봄 서비스 등 제공(232만명)
- (주거)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재택 수리,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, 주거 인근 유휴공간, 골목 환경 정비 등(57만명)
- (문화) 문화 소외지역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·영상 상영,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영상 음성 해설, 자막 제작 등(82만명)
- (환경) 폐플라스틱, 스티로폼 수거 등 지역 환경 정비, 탄소중립 등 캠페인(15만명)

### ④ 사회적목적 재투자 증가

- '24년 사회적목적 재투자 기업수는 2,485개로 '07년 대비 크게 증가(78배), '24년 재투자 금액도 3,803억으로 크게 증가(93배)

\* [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(개)] ('07) 32 → ('17) 943 → ('22) 2,380 → ('23) 2,394 → ('24) 2,485  
[사회적 목적 재투자액(억)] ('07) 41 → ('17) 695 → ('22) 2,235 → ('23) 2,839 → ('24) 3,803

## II. 추진방향

1

### 목표와 전략

- ❖ [목표]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회복 및 사회적기업 지속 성장 기반 구축
- ❖ [4대 전략]
  - ①사회적가치를 기반으로 ②지역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,
  - ③지원체계 혁신을 통해 ④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

#### ① [가치] 사회적가치 기반 지원체계 확립

- 기존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, 사회적가치에 기반을 두고  
발굴-육성-성장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
- 사회적가치 성과가 높을수록 더 성장하는 구조로 유도

#### ② [협력] 지역 기반의 협력 생태계 조성

- 약화된 지역 생태계를 복원하여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·  
해결하는 '지역사회 기여(local Impact)' 모델을 구축
  - 지방정부 - 사회적기업 - 민간지원기관 - 시민사회 간 협력 강화
  - 지역주체가 협력을 통해 이룬 사회적성과를 보상하는 '사회적경제  
생태계 활성화' 사업 신설

#### ③ [혁신] 민관협력형 지원체계 혁신

-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권역별 지원  
센터로 중형화(19 → 6개) 하여 인증·SVI 등 공공행정 지원 강화
- 현장밀착형 지원기능 강화 위해 민간지원기관 협력체계 복원 및 확대
- ESG 경영을 추진하는 공공·민간부문과 사회적기업 간 협력 강화

#### ④ [지속] 지속가능한 정책추진 기반 마련

- 법·제도 개선 통해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
- 사회적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

## 「생태계 회복」과 「사회적가치」 기반 지속 성장

### 1. 사회적가치 기반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

- 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
- ②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 제고 유도

### 2. 지역 중심의 협력 생태계 조성

- ① 지역 주체 간 협력 통한 사회문제 해결 지원
- ② 지역 내 사회적기업 사회성과 확산 위한 인센티브 신설
- ③ 지역·현장과의 협력적 논의기구 마련

### 3. 민관협력형 지원체계 혁신

- ① 지역·현장 중심의 지원체계
- ②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
- ③ 공공·민간기관 협력 생태계 조성

### 4.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

- 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성장 위한 법·제도적 기반 마련
- ② 사회적기업 인식 개선 및 신뢰 회복

중앙·지방정부·사회적기업·민간기관 “협업 거버넌스”

### III. 세부 추진과제

1

#### 사회적가치 기반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

❖ 획일적 지원 방식이 아닌 발굴 - 육성 - 성장단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적가치 성과 확산 유도

##### 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

###### [발굴] 창업지원

- 창업 진입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·복원 ('26년 300억 (500팀, 팀당 2~5천만원 지원))
  - ①초기 창업형부터, 사회적기업 ②인증전환형, 창업실패·중단기업의 사회적가치 기반 재도약을 지원하는 ③재도전형 등 유형별 접근
    - \* 청소·경비·폐기물 운반 등 공공서비스 다수 위탁업종 사회적기업 발굴·육성 지원
  - 일회성 지원을 지양하고 사전 기업진단·역량강화·투자·판로 연계 - 성과관리·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

###### —〈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개편 전·후 비교〉

	~'23	'24~'25	'26~
지원방향	단순 발굴 중심		인증 전환 중심
지원대상	창업 3년 이내 예비 또는 초기 창업팀	폐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초기창업형(창업 5년 이내 기업)</li><li>· 인증전환형(창업 5년 초과 기업)</li><li>· 재도전형(폐업 등 이력 있는 기업)</li></ul>
지원규모	균등지원(30백만원)		유형별 차등지원(20~50백만원)
사후관리	창업종료 후 관리 미흡		창업지원 졸업팀 대상 멘토링 등 후속 지원 강화

## [육성] 고용 창출 지원

- 초기 사회적기업 정착을 위해 인건비 지원을 복원하되, 전면 개편 ('26년 국비 321억+지방비 107억)
  -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하는 (예비)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여, 취약계층 고용안정 유도
  - 사회적가치 성과가 높은 기업에 지원수준 및 기간을 우대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

### —〈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개편 전·후 비교〉—

	~'23	'24~'25	'26~
지원대상	일반인력(일반+취약계층), 전문인력을 고용한 (예비)사회적기업		일반인력(취약계층)을 고용한 (예비)사회적기업
지원조건	①신규고용 & ②고용기간 제한 없음 & ③상시근로자 조건 없음		①신규 고용 & ②6개월 이상 고용유지 & ③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(30인 이상 SVI 탁월우수기업은 지원)
지원수준	최저임금의 70%(취약계층)		月 50~90만원(SVI 우수 이상 우대)
지원기간	최대 5년(예비 2년, 인증 3년)		최대 3년(기본 2년 + SVI 탁월우수 1년)

- 청년 대상 사회적기업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
  - 쉬었음 청년에 사회 적응 및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회 제공, 사회적기업은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성장 동력으로 활용
  - \* **사회참여형 프로그램 활성화:** 쉬었음 청년의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의 일경험을 지원하면서, 현장성 있는 교육훈련 등 적응력 향상을 지원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상 사회적기업 고용 적극 연계
  -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인건비 지원을 적극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에 적극 취업 알선

## [성장] 판로·경영·자금지원

### 〈사회적기업 성장지원 개편 전·후 비교〉

	'25	'26
① 판로지원	다양한 채널 판로지원 부족	신규 판로 플랫폼 활성화, 공공, 지역 내 구매수요 창출
② 경영지원	기업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불충분	성장단계별 역량 제고 및 세제 지원 확대
③ 자금지원	정책·민간 자금조달 부족	정책(융자지원 신설) 및 민간 자금지원 확대·연계

#### ① [판로지원] 판로플랫폼 개편 및 공공구매 확대 유도 ('26년 50억)

- 온라인 판로지원 플랫폼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\*, 사회적가치가 반영된 '착한 상품' 및 '착한 소비' 확산

\*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판로 플랫폼 신규 개통·운영 ('25.9월~)

[공공기관: '가치장터'] 실적관리 및 결제 간소화, 맞춤형 구매지원, 나라장터 연계 ('26.1월)  
[국민: 'Store36.5'] 생산기업의 사회적가치성과 정보공개, 제품 추천, 기획전 등

-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·서비스 우선구매 제도 내실화

- 사회적기업 제품 생산범위 기준을 명확화하여, 공공기관 구매 편의를 높이고 우선구매제도 활용 확대 유도

\* [생산범위] (기존) 사회적기업 제품이 아닌 완제품에 미세가공 시 가공부분 한정 인정  
→ (변경) 중소기업 제품에 미세가공 시 전체 생산품 구매실적을 인정

- 사회적기업·공공기관 대상 우선구매 교육 및 구매상담회 활성화  
(연 3회 → 연 12회, 매달)

- '지역특화 스타상품' 지원 및 '고향 사랑 기부제' 연계 강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판로지원 확대

\* 지역사회 사회적기업·지방정부·대학·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, 지역 특화 상품을 발굴·개발 및 판로개척 지원 ('26년 3억)

## ② [경영지원] 기업 역량 제고 및 부담 경감을 위한 경영지원 강화

- 사회적기업 창업 초기부터 규모화 단계 등 성장 단계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스텝업 지원사업 확대\* ('26년 77억)
  - \* [디딤돌] 인사·노무·회계 등 기초 경영지원('26년 1,100개), [도약기] R&D, 마케팅 등 사업모델 고도화(100개), [성숙기] 협업 프로젝트 통한 규모화 지원(5개 프로젝트)
- 사회적기업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및 맞춤형 코칭
  - \* 'AI와 함께 하는 사회혁신'을 위해 AI 기술을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 기업 등 민간(마이크로소프트, '25.12 MOU 체결) 연계 지원
- 법인세·소득세 감면 연장,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상향 등 세제 지원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 추진
  - \* ①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('25년말→'28년말), ②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비율 상향(20→30%, '26.1.1~), ③관세행정(추징세액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, 분납 허용 등)

## ③ [자금지원]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위한 자금지원 확대 ('26년 8억)

- '26년 민간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회적기업 대상 융자지원 신설
- 모태펀드 투자 등 마중물 정책자금을 확대해 안정적 경영지원, 크라우드 펀딩, 투자설명회(IR) 등 통해 민간자금 확보 역량 제고

구분	내용
융자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제품·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220억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*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대출금리 중 2.5%p 지원, 최대 3억원 한도</li></ul></li></ul>
모태펀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사회적기업 등을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모태펀드 운용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* 총 568억원 규모의 투자조합 결성, 사회적기업 등에 442억원 투자('11년~)</li></ul></li></ul>
크라우드 펀딩, IR 대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(크라우드 펀딩) 사회연대경제 펀딩 전용관을 운영하여 민간자금 유치</li><li>·(IR 대회) 후원사 대상 투자 설명을 통해 민간자금 유치</li></ul>
교육·안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(교육) '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대상 역량강화 교육' 추진(상·하반기)</li><li>·(안내) 「사회적금융 자금조달 길라잡이」 누리집 통해 자금지원 정보 제공 (<a href="https://socialeconomy.seis.or.kr">https://socialeconomy.seis.or.kr</a>)</li></ul>

## ④ [부처협업] 중기부의 투자·융자(임팩트 펀드·정책자금), 성장지원사업 (TIPS, LIPS\* 등) 등 부처간 이어달리기 방식 연계 지원체계 추진

- \* 민간투자사가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먼저 투자(TIPS: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)하거나 소상공인에게 먼저 투자(LIPS:Lifestyle biz Program for Small brand) 할 경우, 사업화자금 등 매칭 지원

## ②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 제고 유도

### ○ 사회적가치 기반 지원을 위한 사회적가치 평가와 사업연계 확대

#### — [참고: 사회적가치 평가지표]

- (정의) 사회적가치지표(SVI: Social Value Index)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
- (지표구성) 3개의 평가 관점(①사회적성과, ②경제적성과, ③혁신성과)에 따라 총 14개 지표 구성
- (측정결과) 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5개 등급 (탁월, 우수, 양호, 미흡, 취약) 산출

- 기존 민간이나 지방정부의 자율적 연계사업 외에도, 인건비 지원, 경영·판로 등 각종 성장지원사업에 사회적가치 평가를 우대 적용
- 사회적가치 측정결과와 공공기관 경영평가\* 간 연계 강화 추진  
\* (예)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SVI 우수이상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한 실적 가산

### ○ 사회적가치 평가체계 개선

- (지표) 업종별 편차 축소 등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현장 수용성 제고, 타 화폐가치 기반 사회성과 지표와의 정합성·연계 가능성 검토
- (평가) 지방정부·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'가칭사회적가치평가 위원회' 설립·운영하여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 도모('26~)
- (유효기간) 사회적가치 평가지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지표의 활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제고

### ○ 원활한 사회적가치 성과 측정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강화

-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 미흡·취약 등급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심화 코칭 제공
- 사회적가치 측정 신청 전 자가진단 활용,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측정 준비 과정 지원 강화

- ❖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해  
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가치 확산 도모

### ① 지역 주체 간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지원

-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, 지방정부, 민간지원기관 등 지역주체 간 협력모델 구축 ('26년 국비 137억+지방비 59억)
  - '26년 노동통합 및 통합돌봄 문제해결형 협업 모델을 시작으로, 성과분석 후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 모델로 확대
    - \*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공모·선정, 중앙(70%)·지방(30%) 매칭 지원

#### —〈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개요〉

##### . 거버넌스 추진체계안



##### . 전략사업별 세부 사업내용 예시

노동통합	① 취약계층 맞춤 자립패키지 운영: 심리상담, 금융 컨설팅, 취업지원 등
	②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기업 등 사업 지원: 교육훈련, 현장적응 지원 등
	③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(지방정부·사회적기업·지역대학 등)
통합돌봄	① 지역 특화 돌봄 패키지 운영: 영양관리, 건강, 안전 이동, 주거 관리 등
	② 돌봄 서비스 고도화: 노인 특화 서비스 개발, 전문가 양성 지원 등
	③ 돌봄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(지방정부·병원·보건소·사회적기업 등)

## ②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신설

-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보상 강화 ('26년 국비 50억+지방비 50억)
  - 취약계층 고용·사회서비스 제공·환경개선 등에 기여한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, 성과 비례 인센티브 지급
    - \*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사회성과를 측정·검증한 이후 사회성과의 20% 범위 내 인센티브 지급 [중앙(50%)·지방(50%) 매칭지원]

## ③ 지역·현장과의 협력적 논의기구 마련

-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발전 및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·현장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긴밀한 소통 강화
  - 당사자조직·지원기관·현장기업·전문가 등 참여하여 정책방향을 설계 및 평가하는 '가칭'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' 구성·운영('26년~)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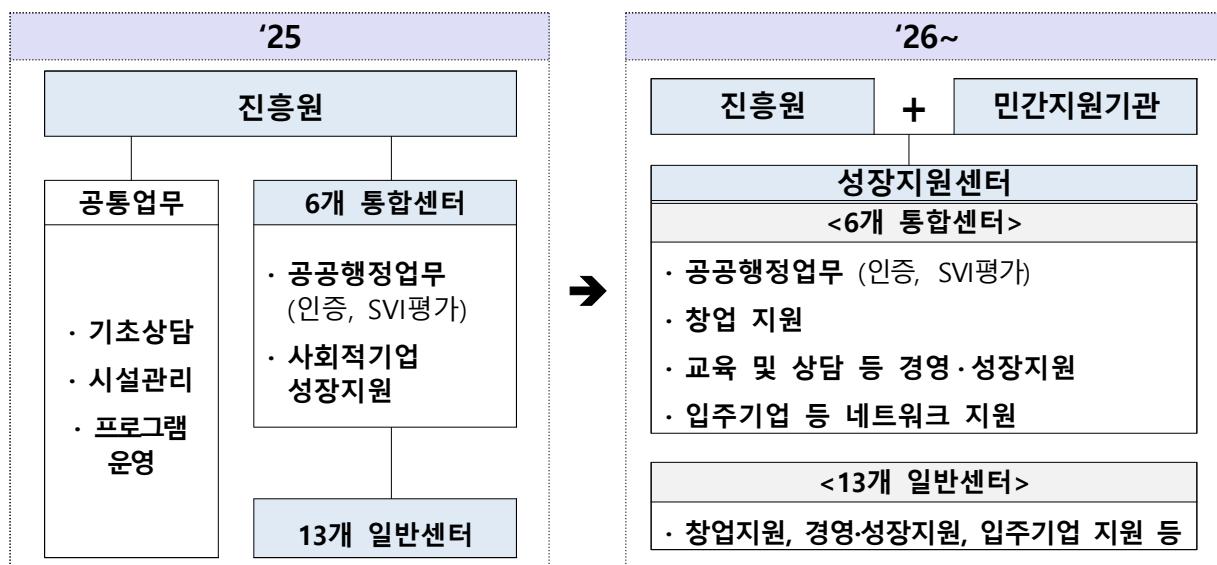
## 민관협력형 지원체계 혁신

- ❖ 정부 주도도, 민간 방임도 아닌 균형잡힌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
- ❖ 공공·민간의 ESG 활동과 사회적기업 활동 간 연계 확대

### ① 지역·현장 중심의 지원체계

- 공공과 민간의 강점을 바탕으로, 합리적 민관협업 구조를 형성하여 현장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혁신
  -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지역별 특성을 반영, 권역별 센터로 중형화(19→6개) 하고 인증·SVI 등 공공행정의 현장성·공정성 강화
  - 민간지원기관을 통해 창업·경영 컨설팅 등 기업지원 전문성 제고
    - \* 지역 내 우수역량이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형태 우대

## 〈정책 지원체계 개편 전·후 비교〉



## ②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

- 오프라인(성장지원센터) 및 온라인(통합사업관리시스템)으로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지역 현장 기업의 편의성·접근성 제고, 서비스 연계 강화
    - 기존 창업지원(민간기관)과 경영지원(성장지원센터)을 분절적으로 제공  
→ 성장지원센터에서 통합 제공(창업+경영지원) 하는 방식으로 개편\*

### 〈지원사업 지원체계 개편 전·후 비교〉



-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통합사업 관리시스템 통해 공고, 각종 구비서류에 대한 자동 연계 등 통해 원스톱 서비스 구현\*  
\* 사회적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인증 정보, 고용실적, SVI 결과 등을 자동 연계해 별도 자료 제출 부담 완화, 지방정부 지원사업 공고·신청·접수 기능 추가

### ③ 공공·민간기관 협력 생태계 조성

- 공공·민간의 CSR·ESG 활동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혁신 기능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협력 생태계 조성
  - 사회문제 해결 위한 연대 플랫폼 ('25.9월 '사회적가치 CSR 얼라이언스' 출범) 다변화·확대를 통해 상시적 정보·자원 연계 강화
  - 향후 다양한 지역·민간 중심 협력모델을 표준화하여 사례 확산

모델 유형	협력 목적	주요 자원	주요 내용
자금지원형	성장기반 강화	ESG 투자, 사회공헌기금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확장·혁신 프로젝트 지원</li><li>· 인턴십 및 투자유치 연계</li></ul>
서비스 연계형	운영 효율화	물류, 마케팅, IT 인프라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특허·IT·마케팅 등 서비스 제공</li><li>· 비용 절감 등 맞춤형 연계</li></ul>
전문 프로보노형	경영역량 강화	회계·법률·특허 등 전문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법·회계·노무 등 전문가 매칭</li><li>· 성장 애로 해결 컨설팅</li></ul>

- 민간·공공기관 자원(자금, 홍보, 경영·법률 컨설팅 등)과 사회적기업 간 연계하는 캠페인(Social Enterprise 브릿지 캠페인) 등 협력 강화

\* KDB산은, 하나금융, 신세계,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'25년 63개소 공공·민간기관 74개 사업 협력

## 4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

### ❖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 성과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

#### 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한 법·제도적 기반 마련

- 사회적기업 공제사업 운영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민간 자조기능 강화 및 경제적 안정 도모
  - 인증 사회적기업의 필수적인 사회적목적 재투자 금액(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이상) 등을 재원으로 하여, 자체적인 안정적 재원 마련
  - 융자 등 공제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보호 및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연대를 통한 경제적 안정과 도약

- 사회적기업 당사자의 법정단체 신설 및 협의체 구축
  - 당사자조직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,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공식 주체로서 소통하여 책임감 있는 정책 파트너 지위 부여
  -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기업 +진흥원(성장지원센터)+지방정부 간 상시적 협의체 구축·운영
-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(5→3년)·변경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
- 주식상장 등으로 인증요건(사회재투자 등) 유지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, 사회적가치 지속 추구를 전제로, 인증 출입(Exit) 인정제도 도입 검토
  - \* 예) B-corp 인증 등 사회적가치 추구가 확인되거나 연계기업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, 가칭 '사회적기업 명예의 전당'에 포함하고,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

---

## ② 사회적기업 인식 개선 및 신뢰 회복

---

- 사회적기업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다각적 홍보 강화 ('26년 5억)
  - '가칭 이달의 사회적기업' 선정·홍보('26년 3분기~) 통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우호적 환경 조성
  - 사회적기업 역할과 성과를 알리기 위해 시상식 확대 개최, 우수 사례 기획 홍보, 플리마켓 등 만남의 장 등을 통해 점점 확대
-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('26년 7억)
  - 온라인 교육(소셜클래스) 및 청소년 봉사학습 운영, 업무담당자 교육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온·오프라인 교육 내실화
  - 사회연대경제 인재양성 위한 '인재개발원' 설립 타당성 검토
    - \* 인재개발원 설립 타당성 분석('26년, 3억) 후 설립 여부, 기능, 부지 등 검토 계획
- 사업보고서를 기반으로 패널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성과 등에 대한 연구 기반을 마련